

韓國에서의 經濟學 研究에 관하여*

鄭 雲 燦**

<차례>

- | | |
|--------------------------|-----------------------|
| I. 經濟學 方法論에 關하여 | 問題點 |
| 1. 經濟學 方法論의 展開過程 | 2. 自生的 發展을 為한 길 |
| 2. 新古典派 經濟分析의 方法論 | III. 外債의 政治經濟學 |
| 3. 新古典派 經濟分析의 問題點 | 1. 新古典派 資本觀의 問題點 |
| 4. 新古典派 經濟分析의 改善策 | 2. 外債의 原因과 그 歸結 |
| II. 效率性과 衡平性, 自主性的
調和 | 3. 韓國에서의 經濟學 研究
方向 |
| 1. 效率 또는 成長爲主 政策의 | |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經濟學 研究와 관련된 問題를 지적하고, 그 문제 解決을 위한 하나의 方면으로서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方向을 제시하는 데 있다.

비록 피상적일지는 모르나 나의 관찰로는 오늘날 경제학 연구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는 미국경제학의 亞流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마르크스 經濟學 또는 制度經濟學이 경제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지난 10여년간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大學, 研究所 및 政府에 대거 진출하면서 미국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新古典派 均衡理論이 경제학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다. 신고전파 균형이론은 매우 精緻한 數理의 技法과 假說檢定의 計量的 技法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한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經濟現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經濟外的 여건으로서의 제도, 문화,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평가 기준으로서 지나칠 만큼 좁은 의미의 效率性에만 의존

* 이 글을 쓰는데 많이 도와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王允宗, 김상조, 위성백군에 사의를 표한다.

** 서울大 社會大, 經濟學

함으로써 衡平性 및 自主性에 대한 배려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韓國經濟의 現狀을 올바르게 認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方法論을 살펴 보고, 각각의 方法論이 지닌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模索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제 1절에서는 여러가지 경제학 方法論을 살펴 보고, 그 중에서도 현재主流를 차지하고 있는 新古典派 經濟理論이 形成된 배경과 그 限界點, 그리고 그 개선책을 논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 2절에서는 國民經濟의 評價基準으로서 效率性, 衡平性, 自主性를 提示하고, 각 기준들 사이의 관계를 論함으로써, 신고전파 경제이론이 지니는 가치기준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국민경제의 가치기준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 3절에서는 제 2절에서 제시된 기준에 立脚하여 外債問題를 사례로 들면서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가 취해야 할 방향을 提示해 보기로 한다.

I. 經濟學 方法論에 관하여

1. 經濟學 方法論의 展開過程

경제학은 經濟現象을 分析對象으로 하는 학문으로, 아담 스미드(A. Smith) 이후 약 200년간의 발전과정을 밟아왔다. 여타의 학문에 비하여 그 역사는 짧지만 그 동안 다양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여러 系派를 형성하여 왔다. 여기서 경제학 방법론의 전개과정은 母學問인 사회과학 방법론의 전개과정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分析對象의範圍, 指向하는 價值體系, 論理的構造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담 스미드의 國富論을 경제학 연구의 시발점으로 볼 때, 이 시기는 封建制가 克服되고 資本主義가 생성, 발전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해당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는 人間의 理性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市民社會形成을 위한 自然法思想을 구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 시기의 학문은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성을 추구하였으며, 아담 스미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調和의 神을 탄생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인간’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의 경제학을 넓게 되었다. 아담 스미드 이후 고전학파 경제학은 1870년대에 들어 限界革命을 경험하면서 功理主義의 시작을 경제학에 수용하였고, 效用分

析과 效率性分析에 주력했으며, 이것을 主流經濟學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다아윈(C. Darwin), 헤겔(G. Hegel), 마르크스(K. Marx), 스펜서(H. Spencer)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회과학 방법론이 발전하였으며, 특히 歷史的 諸條件와 經濟外의諸要因을 포함적으로 고려하는 이른바 政治經濟學의 方法論이主流經濟學의 對立學問으로 성립되었다.

주류경제학으로서의 신고전파 경제학은 분석대상의 범위를 '合理的 經濟主體의 經濟行爲'에限定짓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은 경제외적인 요인을 이른바 세터리스파리부스(ceterisparibus) 조항에 포함된 주어진 制約條件으로서만 파악하였다. 즉 여전의 변화는 比較靜學的 분석의 틀 안에서 인식될 뿐이며, 경제외적 여전의 변화가 경제현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分析은 매우 限定的이었다. 또한 신고전파의 경제학은 價值基準을 效率性에 둘으로써, 衡平性, 自主性은 고려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價值中立的인 方法論이主流經濟學의 基本準則이 되어왔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리구조는 假說의 형태로 정립되어 條件部分과 結論部分으로 나뉘어지며, 이러한 가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논리적 一貫性을 유지하면서 결론으로 이끌어지게 된다. 다만 현실적 有意性은 경제현상 중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統計學的方法에 立脚한 검증의 방법으로 평가되어질 뿐이다. 반면에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對立學問으로서의 政治經濟學은 앞서 지적했듯이, 경제분석의 대상 內에 經濟外의諸要因들도 포함시킨다. 또한 新古典派 經濟學의 價值中立的인 태도와는 달리 階級的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특히 社會構造로부터 파생되어지는 不公平性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또한 논리구조에 있어서도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설적인 형태를 배격하고, 抽象性과 具體性의 辨證法의 구조 속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보는 여전의 질적인 변화과정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경제학 방법론의 兩分現象은 啓蒙主義 哲學에서의 자유주의가 保守와 進步의 양극단으로 분화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진보주의는 私的所有權의 폐기를 통한 제도적 변화가 경제內 구성원들의 이해를 調和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비해 보수주의는 시장기구를 통한 自然的인 힘이 존재하여 경제내 구성원들의 이해의 조화는 사적 소유권의 폐기 없이 항상 도달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保守主義의 新古典派의 經濟學이 進步主義

的 政治經濟學을 완전히 拂拭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경제학의主流로서 정착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순조로이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資本主義體制의 長點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전과 경제학의 전개과정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1930년대에 들어 大恐慌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체제는 그 단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었고, 이에 기존의 新古典派의 調和論은 限界를 露呈하면서 自體修正作業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즉 케인즈의 一般理論에서 제시된 國家의 役割이 自由放任에 終焉을 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신고전과 이론이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니며, 新古典派의 綜合이라는 이름하에 기존의 이론을 골격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을 明示的으로 고려하는 이론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고전과 경제학은 자체 内에 여러系派를 包括하면서도 여전히 큰 출기를 형성하였고, 경제학 방법론에서의 優位를 계속 차지하였다. 以下에서는 경제학 방법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과 경제학의 內容과 限界, 그리고 改善方案을 살펴봄으로써, 韓國經濟의 諸問題點을 규명할을 바른 접근방법을 模索해 보기로 한다.

2. 新古典派 經濟分析의 方法論

미국을 중심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과 경제학의 방법론은 미국의 社會科學 方法論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사회과학 방법론의 특징은 理論의 展開 및 構成에 있어서 形式論理學에 立脚하여 內的整合性을 요구하며, 가설의 실증에 있어서는 統計學의 적합성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신고전과 경제학의 방법론도 연구자가 현실로부터 주관적 판단에 따라 前提를 설정하고, 전제의 가정에 違背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역적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간다. 즉 관측된 經濟現象으로부터 가장普遍的이고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속성만을 추출하여 전제를 設定하고 이에 따라 抽象化되고 單純化된 모형을 구축하여 경제적 推論을 하게 된다. 이 때 경제적 추론에 사용되는 經濟模型의 生命力은 現實說明力에 있게 되고, 현실 설명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통계학적 방법이 이용된다.

또한 신고전과 경제학은 현실을 설명하고豫測하는 수단으로 模型을 設定하는 데 있어서, '均衡分析'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採擇하고 있다. 均衡이란 상반되는 두 개의 힘이 서로 一致하여 外部의 충격이 없는 한, 그 상태를 유

지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에서의 상반되는 두 개의 힘은 주로 需要와 供給을 가리킨다.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은 경제학에 있어 重要한 分析道具로 사용되고 있으며, 균형분석이란 두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均衡狀態를 分析하는 것이다.

신고전과 경제학이 ‘균형분석’에 치우치게 된 것은, 그것이 소위 ‘안정적 인’ 경제관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資本主義經濟는 항상 均衡에 近接해 있을 뿐 아니라 균형으로부터 이탈되었을 경우 다시 균형상태로 회복시키려는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 본 신고전과 경제분석의 방법론은 美國 社會科學의 形式論理學의 方法論에 立脚하여, 현실경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均衡分析’을 採擇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전과 경제분석을 實現經濟에 適用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형식논리학적 방법론이 지니는 限界와 ‘균형분석’의 현실적 妥當性에 관하여 檢討할 필요성이 있다.

3. 新古典派經濟分析의 問題點

모든 이론은 어느 정도 內在的 限界를 지니고 있다. 더우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론이 과연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따라서 신고전과 경제분석의 방법론이 韓國의 經濟現實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有用性을 지니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경제학 방법론을 模索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고전과 경제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그것이 形式論理學의 方法論을 取함으로써 생기는 內在的 限界를 들 수 있다. 일찌기 헤겔을 필두로 하는 辨證法의 論理學者들은 형식논리학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형식논리학이 抽象的, 形式的, 普遍的인 데 비해, 변증법적 논리학은 構體的이며 動態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兩論理學의 방법론적인 특성은 그것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長點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短點이 되기도 한다. 自然科學과는 달리 엄밀하게 통제된 實驗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경제학은 對象의 分析을 위해서는 가장 核心的인 要素를 가정으로서 設定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을甘受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新古典派 經濟學의 가정 설정에 있어서의 비현실성은 이론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차 改善의 여지를 보여 왔으나, 아직도 그 이론이 現實을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在內的 限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分析對象에는 비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가정의 비현실성 뿐만 아니라, 非經濟的 要因을 세터리스 파리부스 조항에 포함된 制約條件으로만 把握함으로써 歷史的 諸條件, 文化風土, 政治社會的 환경이 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대단히 취약한 면을 보인다.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그러한 普遍性을 추구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一種으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諸 模型을 마치 한국의 現實에 그대로 適用可能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경제외적인 요인을 사상한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각나라마다 세터리스 파리부스 조항에 포함된 경제외적 요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 보편성을 추구하는 신고전파의 이론을 一律的으로 適用할 수 없음은 自明하다.

세번째 문제점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價値體系는 지나치게 效率性에 집착함으로써 衡平性과 自主性의 문제에 대한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래 신고전파 경제학은 서구의 自由民主主義思想의 발전과 더불어 分配的 正義를 實現하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효율성에 집착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는 政治的으로 分配的 正義를 暗默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파 이론이 後進國에 導入될 경우 分配的 정의에 대한 고려없이 效率性만을 강조하는 데에서 衡平性的 歪曲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先後進國 間의 無差別的인 互惠平等主義는 觀念的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힘의 力學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自主性를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가치체계에 자주성을 포함시킬 경우, 신고전파 경제학은 國民經濟의 自立的, 基盤을 形成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基礎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限界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이 中心的인 分析道具로서 사용하고 있는 '均衡分析'은 形式論理學의 기초 위에서는 유용한 분석도구로서 評價할 수 있지만, 균형분석이 現實說明力を 갖기 위해서 必須의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과연 쉽게 충족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아울러 앞서 지

직했듯이 각 需要, 供給曲線의 函數式 자체에 비현실적인 가정이 內在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거나 균형으로 부터 이탈되었을 경우 다시 균형상태로 복원하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명확히 논증되고 있지 않다. 먼저 수요곡선의 함수식을 살펴보면, 需要曲線은 消費者들이 效用極大化의 원칙에 立脚하여 價格의 變化에 따라 消費量을 선택하는데에서 導出된다. 그러나 가격 변화시 所得, 消費性向, 기타 여건들은 불변이어야 수요곡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이 위에 그려지는 수요곡선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되는 수요곡선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격 이외의 要因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급곡선의 함수식도 利潤極大化 원칙에 입각하여 企業이 가격변화에 따라 供給量을 선택하는 데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供給曲線이 誘導될 수 있으려면 경쟁적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는' 경우에限定된다. 예를 들어 獨寡占市場에서는 기업이 價格策定者로서 행동하므로 공급곡선의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안고 있는 현실적 유용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有用한 分析道具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한적 가정 下에서 導出되는 결론이 '形式論理學의 真理'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現實的 有用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理論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균형분석과 관련하여 여전히 남는 과제는 現實經濟가 과연 均衡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현실의 상태가 균형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이 필연적으로 均衡狀態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均衡分析의妥當性을 입증하기 위한 論據의 성립여부는 「현실은 균형상태는 아니지만, 균형상태로 신속히 접근해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命題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성립된다면 均衡分析은 충분히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즉 현실이 비록 均衡은 아닐지라도 균형상태로 신속히 접근해 갑으로써 균형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면 균형치는 현실의 우수한 근사치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균형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히 남게되고, 그 괴리의 정도를 計量的 技法으로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그 괴리를 받아 들일 수 있는가는 경제학자들 나름대로의 주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新古典派 經濟分析의 改善策

신고전파 경제분석은 위에서 지적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신고전파 경제분석을 대신 할만한 이론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 못한 탓도 있지만, 價值中立的 성격을 띤 신고전파 경제분석의 방법론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념적 기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규범적 성격을 띤 방법론이 體制批判의 성향을 갖는데 반하여, 실증적 성격을 띤 신고전파 경제분석의 방법론은 자본주의 체제내의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고, 資本主義經濟의 效率性을 논증해 주며,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 요인이 발생할 경우 效率性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新古典派 經濟分析의 한계가 지양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 신고전파 경제분석의 틀을 한국 경제에 적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써는 대략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고전파 경제학이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形式論理學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정의 非現實性은 그동안 신고전파 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계속해서 개선책이 모색되어 왔지만, 특히 한국경제에 이 이론을 적용할 때에는 설정된 가정에 대하여 주의깊게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질적인 經濟主體를 想定하는 가정이라든지, 경제주체 모두에게 情報의 制約이 없다는 가정들은 미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한 비현실적인 가정들 이지만,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경제주체가 穎 同質의 이자는 않은지, 정보의 歪曲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가정을 나름대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고전파 경제학의 분석대상에서 흔히 제외되고 있는 經濟外의 인要因들에 대하여 특히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세티리스 파리부스 조항에 포함된 경제외적 여건이 미국과 분명히 다르므로 동일한 가정하에서도 실제로는 결론에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 배태한 현재의 경제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며, 또한 문화적 풍토가

다른 테에서 빛어지는 심리, 行動目標, 價值觀 등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구의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발전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발전을 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한국의 資本主義의 발전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파악할 경우 소홀해지기 쉬운 정치적 발전의 필요성도 깊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고전파 경제학이 效率性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효율성, 형평성, 자주성의 가치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경제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分配的 정의의 실현을 통한 衡平性의 제고와 아울러 균형있고 效率的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신고전파 경제학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형평성과 자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보완적인 경제 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만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학, 사회학, 외교학 등 여타 인접 사회과학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改善方案이 골고루 充足될 수 있다면, 이른바 '한국경제학'이 開化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야말로 케인즈가 지적한 희귀조 중의 희귀조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效率性과 衡平性, 自主性의 調和

1. 效率 또는 成長爲主 政策의 問題點

우리는 앞에서 新古典學派 經濟學의 方法論의 成立背景을 살펴보고, 그 方法論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인 均衡分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新古典學派의 經濟學研究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經濟學研究가 效率性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衡平性과 自主性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理論的으로는 新古典學派의 經濟學研究가 價值中立이라는 가치 아래서 衡平性·自主性의 概念을 배격하였으며, 現實的으로는 지난 20여년 간의 이른바 성장에 찬론이 한국 경제학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외자도입—공장건설—고용증대—소득증대—분배형평·자립

경제의 논리로 대표되는 성장예찬론은 성장만 하면 분배문제·자립경제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안이한 생각이 衡平性·自主性에 관심을 덜 쏟게 한 주요한 원인이다.

發展이란 全社會體系의 上向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社會體系의 動態는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것들도 이에 반응하여 변화하고, 또 이러한 이차적 변화는 또다시 주위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키는 식의 “순환적 因果關係”가 모든 내생적인 조건들 사이에 작용한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發展概念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社會體系의 ‘순환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效率性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제학 연구나,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책적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衡平性, 自主性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效率性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衡平性, 自主性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효율 내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의 방향 그리고 지난 20여년 간의 경험을 살펴볼 때, 衡平性과 自主性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일반국민들의 태도가 과거의 단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제효율과 경제성장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기서는 지난 20여년 간 衡平性의 문제가 얼마나 무시되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資本主義經濟에서 市場機構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政府의介入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韓國에 있어서도 經濟에 대한 政府의介入은 예외가 아니었으며, 다른 어느 資本主義國家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經濟에 깊이 간섭하였다. 다른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이 社會保障制度나 기타 厚生福祉施設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韓國의 政府는 지난 60여년간 經濟第一主義를 내걸고 經濟開發戰略의 수립 및 수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韓國政府는 「先成長後分配」의 가치하에서 과감하게 外資를 도입하고 輸出主導型의 工業化優先政策을 펴나갔다. 그 결과 韓國經濟는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新興工業國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韩國의 經濟成長은 經濟成長의 要因들을 새로이 조정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성장요인들을 잠식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經濟成長을 기존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外延的 成長과 生산요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内延的 成長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지금까지의 經濟成長은 주로 外延的 成長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外延的成長은 실업률이 높았던 우리나라에서 雇傭增大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外延的 成長에만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勞動力이전 다른 生產要素이전 生產要素가 雇傭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政府에 의해 주도된 韓國의 經濟成長은 양적으로는 큰 成長을 보였지만, 단기적 成果만을 중시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成長要因을 스스로 잡식해 갔을 뿐만 아니라, 衡平性을 저해하는 데도 한몫을 하였다. 政府가 經濟第一主義를 내걸면서 표방했던 정책들은 과감한 外資導入에 의한 工業化의 추진, 특히 輸出產業優先의 工業化를 政府主導下에서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政府의 이러한 政策들은 결과적으로所得分配의 不公平, 中小企業의 상대적 쇠퇴, 도시와 농촌의 不均衡을 발생시킴으로써 衡平性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효율성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한국에 있어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소득분배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물론 南美諸國이나 南아시아 諸國에 비하면 아직은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는 꼭 낙관할 수 없다. 經濟成長이 衡平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과거 20여년간 「先成長後分配」의 가치 아래 그러한 문제를 도외시 하였다. 이는 先進資本主義國家들에서 볼 때, 經濟成長의 段階에서는所得分配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도 經濟가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分配가 호전되었다는 경험에 기대를 전 것이다. 그러나 많은 先進國들의所得分配는 分配의 衡平을 향한 꾸준한 노력하에서 얻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所得分配는 정부의 주도가 오히려所得分配不均衡을 조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

所得分配의 不均衡의 심화는 비단 국민의 위화감을 만들어 낸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國民經濟의 效率을 그만큼 좀먹는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經濟가 發展하기 위하여는所得分配의 不均衡이 유리하다는 이론이 널리 신봉된 때가 있었다. 그 이유는 低所得層은 消費性向이 높기 때문에 資本形成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資本家에 유리하게所得이 分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經濟發展이 오직 資本形成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는 관념, 그리고 부유층은 저축성향이 높고 저소득층은 저축성향이 낮다는 가정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發展은 資本貯蓄 豈만 아니라, 勞動者의 노동의욕 및 노동생산성에도 크게 의존하므로, 所得分配의 不均等의 심화는 國民經濟全體의 능률을 해치게 된다. 또한 부유층의 저축성향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태도가 고소득층의 그것에 비해 오히려 더 전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所得分配의 不均衡보다는 오히려 所得分配가 均等하게 이루어지는편이 經濟發展에 많이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막대한 外資導入은 일부 기업들에만 주어지는 특혜였으며, 外資使用企業들은 정부의 보호하에 성장하여 갔다. 또한 60년대 초반부터의 輸出増大政策은 단기적으로는 經濟成長과 雇傭增大에 기여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所得과 富의 不均衡分配와 인위적 자원배분에 의한 資源使用的 非效率을 빚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輸出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수출을 함으로써, 정부를 통해 稅制나 融資面에서 여러가지 특혜를 얻어내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輸出物量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技術開發보다는 價格引下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가격인하로부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높은 價格, 政府로부터의 특혜는 이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에 비해 내수산업에 치중해 있는 中小企業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利潤의 대부분이 企業家에게, 특히 大企業의 企業家에게 편중될 경우, 이는 勞動者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技術開發을 저해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 技術開發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技術者들에게서 주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大企業들처럼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안전운행만을 원하며, 市場에서는 獨寡占的 지위를 갖고 남의 기술을 모방이나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技術開發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技術開發에 대한 의욕은 오히려 中小企業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를 위한 여건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뒤질지 몰라도 市場에서의 競爭을 의식하기에 中小企業들은 技術開發에의 강한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위주의 경제운영은 기업가의 체질도 관료화시켜 기술개발보다는

당장의 成果爲主의 企業運營을 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大企業에서 특히 심하다. 中小企業들은 대다수의 一般市民에 기반을 두고 그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大企業 보다는 덜 관료화된, 민주적인 풍토위에서 전문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이노베이션을 유도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中小企業을 육성해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不均衡이 가장 심화된 부분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산업화과정에 있어서는 工業은 점차 팽창하고 農林業은 이에 따라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여기서 農林業이 축소된다는 것이 결코 農民의 궁핍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도시가 커지고 농어촌이 작아진다는 것이 곧 농어촌의 폐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農業도 상당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外國으로부터의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農產物價格이 비교적 저렴하게 되어 農民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工業의 資本集約度의 증가, 中小企業의 부진 등으로 말미암아 農村으로 들어가는 企業의 수는 극히 적고, 따라서 農民의 農外所得源도 미약한 실정에 있다.

우리 나라의 農業政策을 보면 農工並進 내지 重農政策이 전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실적은 항상 계획에 미달하였다. 특히 第4次 5個年計劃의 말기부터는 比較優位論에 바탕을 둔 輸入自由化政策에 입각하여 農業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官邊에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比較優位論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현실적인 假定이 필요하다. 특히 比較優位論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比較優位論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政策方向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比較優位를 전면에 내세우는 예는 드물다. 더욱기 農業政策의 기본을 比較優位에 두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우리 나라의 主穀의 自給率은 근년에 와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穀物全體의 自給率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穀物輸入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外資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農村人口가 앞으로의 工業化에 일부 참가해야 할 일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農村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은 衡平性의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人力需給의 效率側面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

게 되는 것이다.

2. 自生的 發展을 위한 길

1) 衡平性의 필요성

우리는 앞에서 經濟效率·經濟成長에만 중점을 둔 經濟運營이 계층간 所得分配의 不均衡, 中小企業의 상대적 쇠퇴, 도시와 농촌 사이의 不均衡을 유발시킴으로써 衡平性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效率性과 成長潛在力を 잠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과거의 成長 一邊倒의 開發戰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發展은 '自生的 發展'이다. 여기서 自生的 發展이라는 것은 '發展要素를 스스로 造成해 가는 發展'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존의 發展要因을 소진해 가면서 이룩되는 發展이 아니라, 항상 發展要因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이룩하는 發展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發展이란 全社會體系의 上向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自生的 發展은 일반적으로 均衡的 成長을 수반한다. 이를테면, 實物部門과 金融部門, 工業部門과 農業部門, 輕工業과 重工業, 大企業과 中小企業 등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것이 自生的 發展이다. 여러 成長要因들은 순환적 因果關係에 있기 때문에, 그 成長要因이 끝고루 갖추어야 經濟發展이 自生的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產業別 그리고 地域別 成長潛在力은 각각 다르다. 成長在力이 큰 產業이나 地域이 먼저 發展하기 때문에 經濟發展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정도는 不均衡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自生的 發展에서는 先導部門에서의 發展이 다른 門部의 發展을 유도하여 다시 종래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균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經濟의 均衡發展은 그 자체가 目標인 동시에 自生的 發展의 必要條件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經濟學研究는 均衡發展 즉, 衡平性의 확보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自主性의 필요성

自生的發展은 또한 國民들의 自發性에 기인하는 自主的 發展일 것을 要求 한다. 1960년대 들어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시동을 걸었으며,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쳐 직접, 간접으로 경제에 간여해 왔다. 그러나 經濟發展은 언제 어디에서나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國民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政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政府가 經濟發展을 주도할 수 있는 시기는 經濟構造가 극히 단순한 때에 한한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政府主導는 당장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自主的發展은 行政의 原則이 아닌 經濟原則에 의해 國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自主的發展의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自立經濟 즉, 對外的自主性의 달성이다. 自立經濟의 여부가 그 國家의 獨립성 및 자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自立經濟는 완전히 自給自足의 體系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릇 현대의 모든 經濟는 자기 獨립성만을 고집하여 發展할 수는 없고, 海外經濟와의 관련하에서 발전하여야 한다. 심지어 共產國家들도 완전한 封鎖經濟體制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經濟的自主性을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經濟自立은 對外去來를 하되 대등한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海外部門에 의해 經濟가支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 經濟의 對外開放의 必要性도 그 經濟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의 經濟的自主性은 객관적인 經濟統計에 의해 나타나는 量의 문제뿐만 아니라, 國民들의 自立의지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주관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自主性 역시 衡平性과 마찬가지로 價值判斷을 內包하고 있다. 이에 견주어 볼 때 新古典學派 經濟學은 自主性을 과학성이 결여된 價值判斷으로 간주하여 自主性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다만 국제거래에 따른 이익만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지난 20여년간 外資의 導入을 통한 輸出產業의 육성이라는 成長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對外依存的 產業構造와 막대한 外債라는 成長장애 요인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第3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自主性의 상실 즉, 對外依存性의 심화는 그 經濟가 國제經濟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國際分業秩序 속에서 比較優位에 따라 國內產業構造를 조정당하게 한다. 이는 對內的均衡發展 즉, 衡平性을 회생시켜 결국 成長潛在力を 잃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先進國들의 新保護貿易主義 경향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新保護貿易主義는 先進國들이 自國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非關稅貿易障壁을 설정하고, 行政的, 法的, 압력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市場開

放을 요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결국 新保護貿易主義는 先進國들의 장기적 경기침체·구조적 경직성·주요산업의 사양산업화 等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產業構造再編成에 드는 조정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國際分業秩序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美國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产业의 自由貿易化는 이러한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혼란기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그 경제의 對外依存度에 의해 좌우된다. 결국 그 경제의 對外的自主性은 그 경제의 장기적 成長潛在力의 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輸入開放壓力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經濟學研究가 自主性에 기울여야 할 關心의 정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自生的發展을 위해서는 그 經濟의 均衡的發展과 自主的發展이 必要不可缺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經濟學研究는 效率性 뿐만 아니라 衡平性·自主性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外債의 政治經濟學

여기에서는 外債문제를 事例로 들어 經濟的要因만을 그 分析대상으로 하는 新古典學派의 開發理論과 한국의 輸出·外資主導成長政策의 한계 및 한국에서의 경제학 연구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 보겠다.

1. 新古典派 資本觀의 問題點

먼저 新古典學派의 開發理論에서는 資本을 ‘物理的機能’만으로 생각하여 단순히 生產의 要素 가운데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같은 資本觀에 의하면, 海外貯蓄·外國資本과 國內貯蓄·國內資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外國資本과 國內資本이 갖는 社會經濟的機能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高度技術과 海外市場 확보로 體化된 外國資本이 國內資本 이상의 社會經濟的 발전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主權을 가진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으며, 資本主義體制에서는 私有制度와 私有權이 존재한다. 즉 현실세계에서는 資本은 物理的機能은

물론이고 일체의 생산 요소와 社會政治的인 支配力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手段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外國資本은 國內 資本과 차이가 없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갖는다는 新古典學派의 관점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全社會關係에서 經濟的 要因만을 分析하는 데서 나온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新古典學派의 資本觀은 개발도상국의 外資導入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며, 外債의 变제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經濟成長을 폐하는 개발도상국은 상당한 규모의 資本增大, 즉 投資를 필요로 하는데, 投資에 필요한 資金은 일정 기간내에 國內貯蓄 동원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이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첫단계에서는 차입된 자금으로 資本財나 消費財를 도입하게 되며, 여기서 輸入이 輸出을 초과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過去의 차입에 대한 利子支拂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輸入초과를 가능케 하기 위한 資金의 필요때문에 차입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차입된 자금이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면, 즉 차입금이 개발도상국의 원리금 상환 후에도 계속 생산시설로 되어 남는다면 이는 개발도상국의 生產力を 향상시키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生產을 증대시키게 된다. 生產의 增大는 결국 輸出増대로 나타나고, 輸出이 輸入을 초과하게 되며, 輸出초과에 따른 外貨收入으로 利子 및 元金을 变제해나갈 수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은 번영을 누리면서 外債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新古典學派의 開發論理은 資本의 物理的 機能만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社會政治的인 면에서의 특수성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발論理의 結果는 오늘날 第3世界의 外債危機로 나타나고 있다.

2. 외채의 원인과 그 귀결

1) 수출 의자주도형 경제정책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新古典學派의 開發論理에 따라 대량의 外債를 도입하여 經濟成長政策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우리 나라가 1960년대 초에 輸出·外資主導型의 經濟開發政策을 선택하게 된 社會政治的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經濟開發政策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政府權力의 性格 내지 政策意志와 결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것이 그 이후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60년대초까지 한국사회경제가 안고 있었던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는 國民經濟의 기반을 확립하는 開發政策을 선택하지 못하였고, 그대신 先進國의 논리에 쫓아 對外依存的인 輸出·外資主導型의 成長 즉, 積進적 發展을 지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對美依存的 國防이라는 기준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對外依存의 단절이 곤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배층인 정치관료와 기업가들이 서로 유착하여 그들의 社會經濟的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민족발전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國民意識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輸出·外資主導經濟開發政策의 선택은 政治·社會·經濟的인 측면과 經濟理論 즉, 新古典學派의 開發理論의 측면에서合一點을 찾은 것이다. 그 이후 이와 같은 정책을 선택하게 했던 여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輸出·外資主導經濟成長基調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일단 成長 자체만으로 보면 그들의 의도가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自生的 發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外債累積의 原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 외채의 일반적 원인

일반적으로 外債累積의 原因으로는 그 構造的 要因으로서 國民貯蓄率의 低位, 投資效率性의 末洽, 輸出競爭力의 弱化, 產業構造의 脆弱性과 誘發輸入增加 等이 지적되고 있으며, 國제적 要因으로서는 石油危機와 國際高金利等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分析은 正當한 것으로써, 위에 열거한 要因들이 우리나라 外債累積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要因들이 아무런 因果關係 없이 發生한 것이 아니며, 그 因果關係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要因만의 分析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例를 들어 우리나라의 國民貯蓄率이 낮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所得水準이 낮고 인플레가 만성화되었으며 금융산업이 낙후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이외에, 國內貯蓄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投資率·成長率을 계획했던 이유도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여기에서는 外債累積의 非經濟的 要因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非經濟的 要因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要因들이 자칫 간과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3) 외채의 비경제적 원인 및 그 귀결

우선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外債는 개발도상국만이 전적으로 잘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따라서 개발도상국만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여년간 특히 1970년대의 石油波動 이후 國際金融機關, 國際商業銀行, 資本輸出을 원하는 先進國의 大企業, 개발도상국의 政治指導者 및 大企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있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비록 이들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류된 oil money와 自國의 잉여자본을 수출하고자 하는 先進國政府 및 金融機關의 의도와 政治經濟的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外資를 도입하고자 했던 개발도상국 政府 및 大企業의 의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규모 자본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자본이동은 經濟的인 考慮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經濟的인 영역에만 한정되고 있지는 않다. 오늘날 제3세계의 外債問題는 國際金融秩序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등장하였으며, 국제적인 支拂不能 事態를 막기 위한 조치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심각한 政治經濟的 壓力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外債問題가 결코 개발도상국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外債에 따른 부담을 개발도상국만이 지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은 外債問題에 있어 國際的인 力學關係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과 對外依存性의 심화에 따른 自主性 상실의 결과가 어려한 것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에 輸出·外資主導 經濟開發基調를 선택하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우리나라가 國內貯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投資率·成長率을 계획하였던 것도 政治社會的인 要因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期待를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期待는 대체로 政治的인 것과 經濟的인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60년대로부터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政府狀況은 民主政治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이로

부터 나타날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政府는 무리하게 높은 經濟成長率과 輸出伸張率 등을 목표로 삼고 이를 강력히 추진달성시킴으로써 경제적 성과가 정치적 불만을 밀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급속한 經濟成長은 우리가 구비하지 못한 資本과 새로운 技術을 필요로 하였고, 이것들을 확보하는 과정은 바로 급속한 外債累積過程이었다. 또한 이것은 만성적인 資金부족으로 인해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부족한 자금을 政府意圖대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金融部門의 낙후를 초래함으로써 國內貯蓄率을 끌어올리지 못하였고, 이것은 또다시 外資導入을 증가시키는 악순환過程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입된 外資는 상당부분이 非生產的인 곳에 쓰여졌다. 外資導入過程에서 政治와 行政이 개입하여 이런저런 구실로 심한 資金流出을 하였으며,企業은 그것을 핑계로 여러가지 특혜를 요구하고 안일한 獨占利潤을 취하려고 노력하였다. 外資導入政策이 성공하려면 外資가 生產的인 곳으로 흘러가서 效率的으로 쓰여지고 그것이 元金과 利子를 값는데 충분할程度의 收益을 올려야 하는데 政治와 行政이 개입된 후 資金이 投資의 우선순위도 따지지 않은 채 배분된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므로, 外債는 生產에 기여함이 별로 없이 계속 축적만 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外資의 非效率的 使用은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특혜와 우대조치를 통해 獨占企業들을 창출함으로써 기형적 產業構造를 낳고 輸出競爭力を 약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輸出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輸入이 그 이상으로 증가함으로써 만성적인 國際收支赤字를 가져오게 하여 外債問題를 더욱 심각하게 하였다.

3. 韓國에서의 經濟學研究의 方向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政治・社會的인 要因은 우리나라의 外債累積過程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는 타당한 分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全社會體系는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에 의해 社會體系의 動態的 變化가 결정된다. 經濟的 要因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는 經濟學研究나 외형적 成長만을 강조하는 經濟政策은 經濟的 要因과 非經濟的 要因들 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무시함으로써 결국 기형적 경제구조를 낳

고 衡平性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관심사인 經濟效率과 經濟成長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국간의 관계가 점차 국제화되어 가는 현상황하에서 기형적 경제구조는 對外依存度를 심화시켜 결국 그 國民經濟의 獨립성과 자율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의 經濟學研究는 그 分析대상으로서 經濟的 要因과 非經濟的 要因 모두를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판단기준으로서 效率性·衡平性·自主性 모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는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한국경제의 自生的發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邊衡尹

1983 分配의 經濟學, 한길사.

李大根·鄭雲嘆 編

1984 韓國資本主義論, 까치.

李承勲

1978. 겨울 “形式論理와 韓國의 社會科學,” 현상과 인식 제 2권 제 4호.

林元澤

1978 第 2 資本論, 一潮閣.

林鍾哲

1980. 8 “韓國經濟와 經濟學의 反省,” 政經文化.

1976 “解放後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研究 및 教育,” 社會科學論文集(서울大 社會科學大學).

趙 淳

1984 “自生的 發展과 經濟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韓國社會의 自生的 發展」經濟學 分野 論文.

1983 “經濟發展의 方向,” 韓國社會의 發展論理, 흥사단출판부.

1981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比峰出版社.

韓國經濟研究院 編

1984 韓國經濟學의 摸索, 韓國經濟研究院 調查資料 4.

瀧澤秀樹

1985 現代 韓國民族主義論, 김용관 譯, 미래사.

Blaug, M.

1980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ane, P.

1983 *The Scope and Method of Economic Science*, Economic Journal.

Geddes, W.R. (ed.)

1985 *Asian Perspectives in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Machlup, F.

1978 *Methodology of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Myrdal, G.

1977. 6 "What is development,"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經濟論集 제XVI권 제 2 호.